

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
일부개정법률안  
(이훈기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4768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4. 10. 18.

발 의 자 : 이훈기 · 주철현 · 권향엽  
김태년 · 이재관 · 김태선  
김용만 · 김영배 · 박민규  
김정호 · 이재강 · 김문수  
박희승 · 이수진 · 위성락  
정을호 · 정진욱 · 신장식  
김교홍 · 황정아 · 박지혜  
조인철 · 박해철 · 강준현  
박홍배 · 김 현 · 문진석  
의원(27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누구든지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,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,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,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신고자를 상대로 그 내용을 확인한 후 해당 공공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,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에 이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의 장이 피신고자인 경

우에도 국민권익위원회가 해당 공공기관으로 신고를 이첩하게 되면 제대로 된 조사 또는 감사가 실시되지 못하고 피신고자인 공공기관의 장에 대한 적절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.

이에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를 받은 경우 그 신고가 이 법의 위반 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의 장이 피신고자인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에 이첩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신고에 대한 조사와 조치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(안 제14조제2항 단서 신설).

법률 제 호

##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그 신고가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의 장이 피신고자인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에 이첩하여서는 아니 된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4조(신고의 처리) ① (생략)	제14조(신고의 처리) ① (현행과 같음)
② 국민권익위원회가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에 관하여 신고자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기관에 이첩하고, 그 사실을 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<단서 신설>	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. 다만, 그 신고가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의 장이 피신고자인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에 이첩하여서는 아니 된다.</u>
③ ~ ⑦ (생략)	③ ~ ⑦ (현행과 같음)